ISSN 3092-4448

KIET 산업 인사이트

2026년 2월호 통권 제2호



주력산업편

주력산업 리뷰_자동차·조선·일반기계·철강·정유·석유화학·섬유·무선통신기기·가전·반도체
산업 트렌드 및 기업전략 인사이트_반도체산업·조선산업 | **국내외 산업정책 인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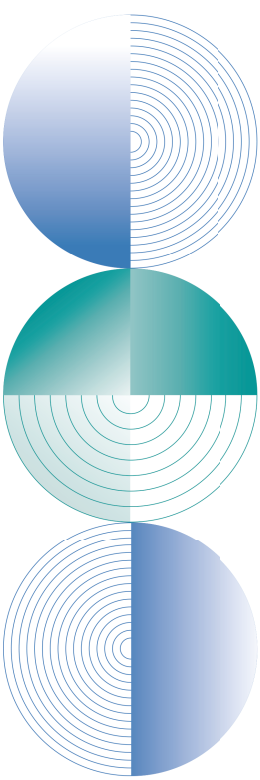
KIET Industrial Insight 산업연구원

KIET

산업 인사이트

2026년 2월호 통권 제2호

주력산업편



차례

주요 경제지표 동향 02

주력산업 리뷰 03

1. 자동차 03
2. 조선 04
3. 일반기계 06
4. 철강 07
5. 정유 09
6. 석유화학 11
7. 섬유 12
8. 무선통신기기 14
9. 가전 15
10. 반도체 17

산업 트렌드 및 기업 전략 인사이트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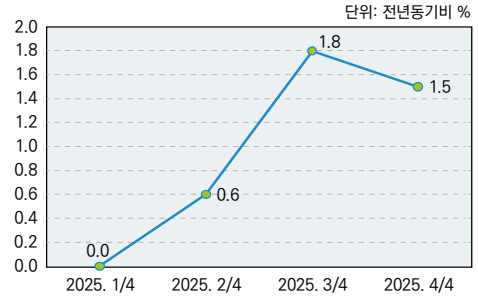
1. 반도체산업 19
2. 조선산업 24

국내외 산업정책 인사이트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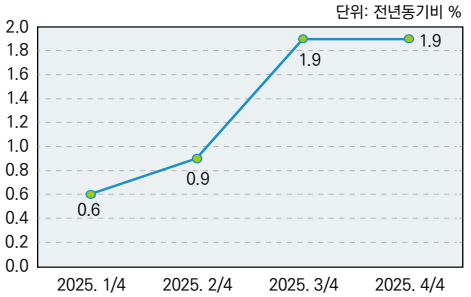
1. 국내 산업정책 인사이트 31
2. 글로벌 산업정책 인사이트 35
3. 업종별 산업정책 인사이트: 철강 38

주요 경제지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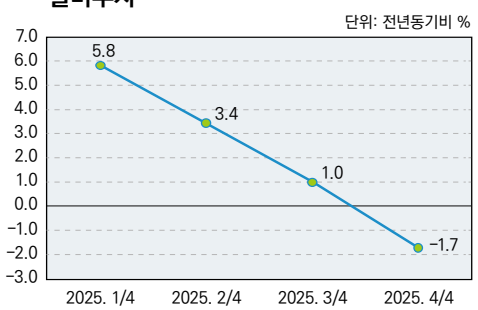
실질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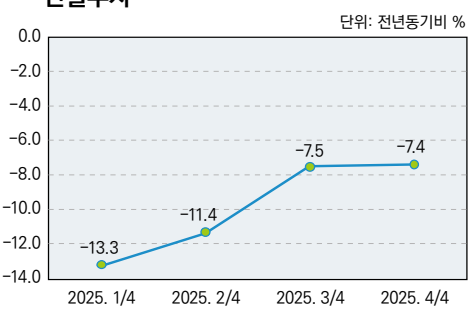
민간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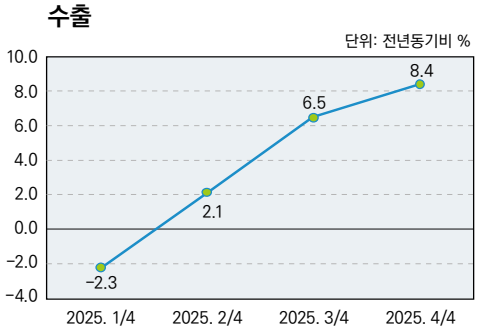
설비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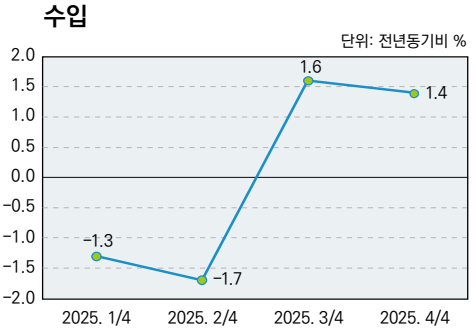
건설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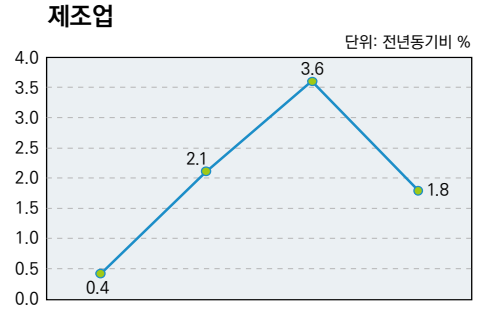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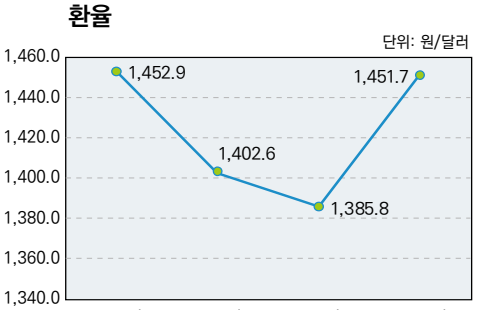
수입



제조업



환율



자료: 국가데이터처(KOSIS), 국민계정(실질, 원계열) 기준; 한국은행(ECOS), 무역/국제수지/환율(시가, 평균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무역정보네트워크.

주력산업 리뷰

1. 자동차

□ 2025년 자동차산업은 내수 판매 증가에도 대미 관세 인상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생산은 소폭 감소

- 자동차 수출은 대미 고관세 충격에도 불구하고 서유럽, CIS, 중동 등 대체 수출 시장 발굴로 전년 대비 0.1% 감소한 931억 달러(자동차부품 포함)를 기록

- 미국의 25% 고관세 부과와 미국 내 전기차 전용 생산공장 신규 가동으로 수출 물량이 대체되면서 대미 수출은 12.0% 감소

- 영국, 독일 등 서유럽, 동남아, CIS로의 수출과 중고차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감소폭을 상당 부분 상쇄

- 부품 수출은 자동차의 현지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정책 강화 기조에 따른 현지 조달 비중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5.9% 감소

- 내수는 전년 내수 판매 부진에 따른 역기저와 수입차 판매가 증가하면서 물량 기준 전년 대비 3.1% 증가한 170만 대를 기록

-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차종의 신규 모델이 투입되고, 완성차업체들의 수출 판매 부진에 따른 내수 시장 전략 강화, 수입 BEV 판매 증가 등으로 내수 판매 증가

- 수출 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년 대비 고금리 완화와 개별소비세 인하, 노후차 교체 지원 등 정부의 내수진작책으로 소비자 구매 여건이 개선된 것도 증가 요인

- 친환경차의 경우 2024년(65만 대) 대비 25% 증가한 81만 3,000대를 기록하며 신규 판매 차량의 48%를 차지

- 특히 중대형 SUV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되면서 하이브리드차 수요가 증가

- 전기차는 2023~2024년 2년간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다양한 차급에서 신차가 출시되고 테슬라, BYD 등 수입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며 전년 대비 52% 증가한 21만 6,000대를 기록

자동차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3	2024	2025				
		연간	연간	연간	1/4	2/4	3/4	4/4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0.4	-2.0	0.3	0.6	-0.7	7.6	-5.4
	생산(전기비)	-	-	-	4.1	-3.0	1.0	-2.4
	출하	10.8	-2.0	0.2	0.3	-0.2	6.8	-5.3
	재고	9.7	4.9	7.8	8.8	10.4	12.0	7.8
	가동률	3.1	-5.9	-1.4	-1.5	-3.3	6.7	-6.3
	내수 판매동향	2.9	-5.7	3.3	3.7	4.1	10.1	-4.2
교역 동향	수출	21.2	-0.5	-0.1	-3.1	-1.9	7.5	-2.4
	수입	2.9	-9.4	3.8	-5.9	3.5	15.9	1.0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부, "수출입동향";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자동차산업동향";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수입승용차등록자료".
주: 1) 4분기 생산동향은 잠정치.
2) 내수 판매동향은 완성차 기준, 생산 및 교역은 완성차와 자동차부품 포함.

- 생산은 내수 판매 증가 전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감소와 국내 업체들의 해외 생산 증가로 수출 물량이 대체되면서 물량 기준 전년 대비 0.6% 감소한 410만 대를 기록하며 3년 연속 400만 대 상회

- 수입은 전동화, 자율주행 시스템 등이 장착된 차량 판매가 증가하고 첨단 부품의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3.8%(자동차부품 포함) 증가

- 완성차는 전년 대비 14.8% 증가한 32만 3,000대를 기록할 전망으로 테슬라의 신모델 투입이 수입 증가를 견인하고 있으며, 기존 독일 고급 브랜드와 BEV, HEV에 강점을 지닌 테슬라와 렉서스 등 일부 업체로의 편중 현상이 심화

김경유 | 경제안보·통상연구실 선임연구위원

2. 조선

□ 2025년 조선산업은 수주, 생산, 수출 증가세 지속

- 2025년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1,160만CGT를 수주하여 전년비 7.4% 증가했으며, 세계 시장의 20.6%를 점유

- 2025년 세계 조선 수주량은 5,640만CGT로 전년비 26.6% 감소했는데, 이는 미국 관세 부과 및 항만세 부과 등에 따른 경기 불안, 중국을 비롯한 주요 조선국의 장납기, 높은 선가, IMO 환경규제 강화 시행 연기 등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

-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세계 시장 감소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 미·중 갈등으로 인한 반사이익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조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3	2024	2025				
		연간	연간	연간	1/4	2/4	3/4	4/4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2.3	17.0	35.6	34.6	41.7	30.9	35.4
	생산(전기비)	-	-	-	14.6	9.2	1.0	11.2
	출하	-5.4	17.5	24.6	24.4	28.4	20.5	25.1
	가동률	-3.1	8.6	45.8	28.7	39.6	50.7	60.4
교역 동향	수출	19.9	17.6	24.1	13.7	25.5	31.9	25.3
	수입	21.1	60.4	15.4	34.1	51.3	-10.6	0.6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4분기 생산동향은 잠정치.

- 한편, 중국은 전년비 34.7% 감소한 3,540만CGT 수주에 그쳤으나 2025년 건조량인 2,270만CGT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으며, 세계 시장 점유율 62.8%를 기록하여 2024년 점유율 70.6%에 비해 하락했음에도 압도적 수준을 지속

- 일본은 전년비 52.5% 감소한 280만CGT 수주에 그치면서 점유율은 5.0%로 낮아져, 상선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추세

• **2025년 조선산업 생산은 연간 전년비 35.6% 증가하여 3년 연속 증가하면서 양호한 흐름을 지속**

- 2023년 920만CGT였던 우리나라 조선산업 건조량은 2024년 1,150만CGT, 2025년에는 1,220만CGT로 지속 증가

- 이러한 흐름이 반영되어 조선업 생산은 2025년 모든 분기에 전년동기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으며, 가동률도 크게 상승

- 수주잔량은 2024년 3,670만CGT에서 2025년 3,590만CGT로 소폭 감소했으나, 3년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을 보유하여 당분간 안정적인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

• **2025년 클락슨 신조선 가격지수는 184.65포인트로 2024년 189.16에 비해 소폭 하락했으나 높은 수준을 유지**

- 2020년 125.6이었던 클락슨 신조선 가격지수는 2021년 153.63으로 크게 상승했고 2024년에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25년 소폭 조정

- 2025년 선가지수 조정은 발주 감소뿐만 아니라 원자재(철강) 가격 하락, 중국 조선사의 LNG운반선을 포함한 공격적 수주 활동 등이 원인으로 추정

• **2025년 수출은 전년비 24.1% 증가한 318억 달러였으며 수입은 15.4% 증가한 46억 달러를 기록**

- 선가가 급등했던 2022~2023년에 수주한 LNG운반선, 대형 컨테이너선과 고가의 해양플랜트를 대량으로 인도하면서 수출은 전년비 크게 증가하여 300억 달러를 상회

- 선박의 수출 증가뿐만 아니라 해외 선박 생산 증가로 선박용 디젤엔진이 전년비 20.5%, 선박용 부품이 전년비 30.9% 증가하면서 조선기자재 수출도 양호
- 수입은 해외로부터의 선박 유입이 증가하여 화물선 수입이 전년비 17.9% 증가한 3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
- 또한 국내 선박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선박용 디젤엔진과 선박용 부품 수입도 소폭 증가하면서 수입 증가에 기여

이은창 | 경제안보·통상연구실 연구위원

3. 일반기계

□ 2025년 일반기계산업은 생산 및 수출 부진 지속

- **2025년 생산은 수출 감소 및 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
- 2025년 국내 기계류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0.6% 증가했으나, 국내 기계류 내수 출하는 전년 대비 0.4% 감소
- 국내 기계류 설비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 출하가 감소한 것은 국내 기계류 설비투자가 수입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추정
- 연간 내수 출하가 0.4% 감소하고 재고가 0.9% 증가하면서 재고율(재고/출하)은 전년(120.4%) 대비 1.5%포인트 증가한 121.9%를 기록
- 가동률은 기저효과 영향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
- **2025년 일반기계 총수출은 약 469억 달러로 전년(511억 7,000만 달러) 대비 약 8.3% 감소**
- 대(對)미국 수출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한 투자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7.4% 감소한 약 124억 4,000만 달러 기록
- 대중국 수출은 부동산 시장 위축 및 제조업 경기 침체 지속으로 인한 수요 감소가 지속되며 전년 대비 6.4% 감소한 약 63억 9,000만 달러 기록
- 대EU 수출은 제조업 생산 회복세 및 설비투자 증대 영향으로 수요가 회복되며 전년 대비 1.0% 증가한 약 59억 4,000만 달러 기록
- 대베트남 수출은 중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확대에 따른 경쟁 심화 및 미국 관세로 인한 투자 수요 위축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한 약 26억 1,000만 달러 기록
- 대멕시코 수출은 미국의 USMCA 재검토에 따른 무관세 혜택 폐지 등 불확실성 증가 및 이로 인한 투자 수요 위축으로 전년 대비 21.4% 감소한 약 18억 5,000만 달러 기록
- **2025년 일반기계 총수입은 약 325억 8,000만 달러로 전년(308억 8,000만 달러) 대비 약 5.5% 증가**

일반기계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3	2024	2025				
		연간	연간	연간	1/4	2/4	3/4	4/4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7.3	-1.5	-1.3	-1.8	0.0	2.8	-5.4
	생산(전기비)	-	-	-	-5.7	-0.6	1.4	1.6
	출하	-5.8	-1.4	-0.4	-1.3	0.0	2.5	-2.7
	재고	-11.9	-5.7	0.9	-5.6	-7.5	2.4	0.9
	가동률	-1.8	-7.1	1.8	-3.3	1.5	6.7	2.5
교역 동향	수출	4.6	-4.2	-8.3	-12.4	-6.4	-7.1	-7.3
	수입	-2.8	0.4	5.5	0.9	6.5	9.4	5.1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4분기 생산동향은 잠정치.

- 수입 금액 기준 원동기 및 펌프 수입이 약 80억 4,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기계요소 59억 9,000만 달러, 기타 기계류 22억 9,000만 달러 순으로 나타남.

- 수입 증감률 기준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수입이 증가한 품목은 목재·광물 및 유리가공기계(+44.6%)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식품가공포장기계(+25.5%), 원동기 및 펌프(+16.5%) 순으로 나타남.

- 제조업 대량 생산의 핵심 기반인 금형 품목은 2025년 수입 금액이 약 3억 3,000만 달러로 작은 편이나, 2024년 이후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2024년 49.3%, 2025년 15.6%)을 기록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관찰 및 대응이 필요

- 전년 대비 수입이 감소한 품목은 운반하역기계(-9.5%), 건설광산기계(-5.6%), 공구(-1.2%) 순으로,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관련 품목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어 수입이 감소함.

김태영 | AI디지털전환연구실 부연구위원

4. 철강

□ 2025년 철강산업은 내수 침체와 부정적인 통상 여건으로 업황 부진 지속

- **철강재 생산은 큰 폭의 내수 감소와 수출 부진 영향으로 물량 기준 5.0% 감소**

- 건설경기 침체 지속 등 부정적 수요 여건과 더불어, 수익성 악화에 따른 기업들의 가동률 조정 영향으로 출하 및 가동률 지수는 각각 전년 대비 3.6%, 4.1% 하락

- 품목별로는 포항, 인천 등 주요 철강 생산지역을 중심으로 설비 가동이 중단된 철근과 수요절벽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봉형강류의 생산 감소가 뚜렷, 열연강판은 수출 개선과 반덤핑 관세 조치 영향으로 전년도 수준 유지

철강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3	2024	2025				
		연간	연간	연간	1/4	2/4	3/4	4/4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2.5	-2.9	-3.4	-8.0	0.5	0.2	-6.3
	생산(전기비)	-	-	-	-5.8	3.0	0.5	-3.0
	출하	2.1	-3.6	-3.6	-4.3	0.0	-1.4	-8.5
	재고	8.1	9.0	-5.3	-4.1	-1.6	-2.8	-5.3
	가동률	2.1	-2.7	-4.1	-8.4	-0.3	-0.5	-6.7
교역 동향	수출	-8.5	-5.4	-9.0	-6.9	-5.2	-7.6	-16.3
	수입	-9.6	-6.4	-11.7	-12.6	-14.3	-3.3	-16.0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4분기 생산동향은 잠정치.

* 2025년 가동 중단 이력: 현대제철(인천) 철근(가동 중단 1개월, 2025년 3월), 현대제철(포항) H형강(가동 중단, 2025년 6월), 동국제강(인천) 압연·제강(가동 중단, 2025년 7~8월)
* 2025년 주요 품목별 생산 증가율(물량 기준, 전년비): 철강재 계(-5.0%), 봉형강류(-9.1%), H형강(-4.1%), 봉강(2.0%), 철근(-10.0%), 선재(-24.4%), 판재류(-1.9%), 열연강판(0.0%), 중후판(-2.0%), 냉연강판(-5.8%), 용융아연도강판(3.7%), 컬러강판(-5.8%), STS 핫코일(-3.3%), STS 냉연강판(-5.3%), 전기강판(8.9%), 강관(-4.2%)

- **내수는 2024년 큰 폭의 철강 수요 감소세가 이어지며 전년 대비 8.9% 감소**

- 철강 내수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주요 건설용 강재 수요 부진과, 중국의 경기 둔화 및 글로벌 통상 여건 악화로 인한 자동차, 기계, 가전 등 주요 제조업의 생산 부진으로 4,300만 톤 수준까지 감소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2020년)를 제외하면 철강 내수는 2007년부터 5,000만 톤 이상을 유지해 왔으나, 2024년 처음으로 5,000만 톤 미만을 기록한 후 감소세가 지속되는 상황, 이는 2002년 이후 최저 수준

- **수출은 하반기 미국발 관세효과 발현으로 감소세로 전환, 물량 기준 전년 대비 1.0% 감소**

- 내수 침체 장기화로 인한 주요 철강 기업들의 수출 확대 추진으로 상반기 철강 수출은 양호한 실적을 나타냈으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50% 철강 관세 부과 영향이 발현되며 하반기 수출 물량은 감소세 전환

- 여기에 연중 이어진 수출 단가 하락으로 철강 수출액은 전년 대비 9.0% 감소

* 대세계 평균 수출 단가는 1,025.7달러/톤으로 2024년의 1,116.0달러/톤 대비 8.1% 하락

- 단가 하락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으로의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특히 수출 물량이 10% 이상 감소한 미국으로의 수출 위축이 두드러짐.

* 주요 지역별 수출 증가율(금액 기준, 전년비): 아세안(-0.7%), 미국(-18.1%), EU(-17.1%), 일본(-12.0%), 중국(-16.8%), 인도(-0.6%), 중남미(-7.5%), 중동(5.1%)

• **수입은 국내 철강 수요 침체와 반덤핑 관세 부과 등의 무역구제 정책 영향으로 물량 기준 전년 대비 11.3%의 큰 폭 감소**

- 2023년 1,000만 톤 규모까지 증가하여 산업 피해가 우려되었던 철강 수입은 2024년에 소폭 감소한 뒤 2025년에는 감소세가 확대되어 860만 톤(반제품 제외) 수준을 기록

- 최근의 수입 감소는 국내 내수 부진에 따른 수입 수요 위축과 주요 수입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 영향이 주효, 특히 2025년 상반기부터 베트남,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수입 철강재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연이어 시행함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입 물량 감소에 영향

* 주요 지역별 수입 증가율(금액 기준, 전년비): 중국(-9.7%), 일본(-21.1%), 미국(0.1%), 인도네시아(3.1%), 베트남(-20.3%), 브라질(-21.1%), 인도(-11.2%)

* 2025년 한국의 무역구제조치 현황: 베트남산 스테인리스(STS)에 최종 덤핑 판정(11.37~18.81%, 2025년 4월), 중국산 열연후판에 잠정 관세 부과(27.91~38.02%, 2025년 2월), 중국산 STS 후판 최종 덤핑 판정(21.62%, 2025년 6월), 일본·중국산 열연강판 잠정 관세 부과(28.16~33.57%, 2025년 7월)

이고은 | 산업탄소중립연구실 전문연구원

5. 정유

□ 2025년 정유산업은 하반기 정제마진 개선으로 연간 기준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으나, 상반기 부진과 대외 수요 위축 영향으로 회복 강도는 제한적

• **지난해 하반기 글로벌 정제마진 개선이 국내 정유사의 실적 회복을 견인**

- 글로벌 정제마진은 1~4월 2~3달러의 낮은 수준이 지속되며 상반기 실적 부진이 심화되었지만, 5월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되며 10월에는 6.97달러/배럴, 11월에는 9.38달러까지 상승

* 글로벌 싱가포르 정제마진(Light sweet cracking 기준, 달러/배럴, 전년 대비 증가율): (2023년) 5.39(-33.2%) → (2024년) 2.60(-51.7%) → (2025년) 4.61(77.0%)

- 2025년 국내 정유사 매출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한 약 134조 원을 기록한 반면, 영업이익은 9,434억 원으로 흑자 전환

* 국내 정유사 영업이익: (1분기) 951억 원, (2분기) -1조 4,223억 원, (3분기) 8,958억 원, (4분기) 1조 3,748억 원

- 하반기 정제마진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아시아 지역의 신규 정제설비 가동에 따른 공급 확대와 탄소중립 정책 강화 및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글로벌 석유제품의 수요 증가율 둔화 영향으로 향후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생산은 하반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부진으로 전년 대비 0.7% 감소**

- 상반기에는 정제마진 악화로 생산이 크게 감소하였지만 하반기에는 정제마진 상승에 따른 가동률 상향 조정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2.0% 확대

정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3	2024	2025				
		연간	연간	연간	1/4	2/4	3/4	4/4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0.2	1.8	-0.7	-6.3	-1.1	2.0	2.1
	생산(전기비)	-	-	-	-3.5	5.1	2.2	-2.1
	출하	1.4	4.2	-2.9	-8.2	-3.2	2.1	-2.2
	재고	5.0	-5.8	-0.3	-7.6	-3.1	-18.7	-0.3
	가동률	0.1	1.8	-0.9	-6.4	-1.0	2.3	1.9
	내수 판매동향	-2.2	3.5	-2.8	-4.9	-4.3	2.7	-4.5
교역 동향	수출	-17.3	-3.2	-9.7	-23.5	-12.7	-2.3	2.6
	수입	-13.3	8.2	-15.3	-5.0	-22.2	-12.4	-22.5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4분기 생산동향은 잠정치.
2) 생산통계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 수출입 통계는 '석유제품(MTI 133)'.

- 하반기 정제마진 개선이 정유산업의 구조적 고마진 사이클 진입보다는 국제 정세의 변동성 확대로 인한 단기적 회복 흐름일 가능성이 큰 상황 속에서 가동률 상향을 보수적으로 유지

• 내수는 경유 및 석유화학용 석유제품의 동반 수요 부진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

- 상반기 석유제품 수요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3분기에는 2.7% 증가하며 일시적으로 반등하였으나 4분기에는 4.5% 감소하며 회복세가 제한

- 정부의 「대기환경개선특별법」상의 경유차 운행 제한 규제 강화로 경유 소비가 전년 대비 6.4% 감소

- 이와 함께 전방산업인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수요 부진으로 나프타는 전년 대비 2.7%, LPG는 4.4% 감소

• 수출은 수출 단가 및 물량이 동반 감소하며 전년 대비 9.7% 하락

-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 단가 하락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전년 대비 약 49억 달러 감소한 455억 달러를 기록

- 수출 단가는 하반기 정제마진 개선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12.8%)으로 인해 전년 대비 9.6% 하락

- 수출 물량은 상반기 전년동기 대비 5.2% 감소하였지만 하반기에는 4.9% 증가하며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0.1% 소폭 감소에 그침.

* 국내 석유제품 수출 물량(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 (2025년 1분기) -14.3, (2분기) 4.8, (3분기) 4.1, (4분기) 5.7

최동원 | 산업탄소중립연구실 부연구위원

6. 석유화학

□ 2025년 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수요 회복 지연, 공급 과잉 지속, 미국 관세 정책 등 여건 악화로 생산, 출하, 수출 부진

- 연초부터 수요 약화와 공급 과잉이 겹치면서 생산과 출하가 동반 감소했고, 하반기에는 미국의 15% 관세 부과가 결정적으로 작용하며 업황 침체가 심화

- 생산은 연중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이다가 10월에 생산과 출하가 각각 9.2%, 9.8%로 연중 최대 폭으로 급감

- 재고는 수요 부진으로 1분기에 전년 대비 3.8% 증가하였으며, 10월에 다시 미국 관세 영향으로 3.1% 증가하였고, 가동률 역시 10월에 8.3% 하락하여 연중 최대 하락폭을 기록

-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합섬원료와 PET 등의 공급 과잉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방산업 수요 회복이 매우 더뎠고, 여기에 8월부터 시행된 미국의 관세 조치가 하반기 생산 위축을 가속화

- 수출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 단가 급락, 중국발 공급 과잉 및 주요 시장 내 경쟁 심화, 미국의 관세 장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연중 부진

- 수출은 연중 국제유가 약세로 단가가 지속 하락하면서 물량을 팔아도 수출액이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

- 하반기에도 10% 안팎의 단가 하락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 시장 관세 부과와 중국 시장의 공급 과잉, 인도·중동·아세안 시장의 자급률 향상으로 10월에 21.3%로 연중 가장 큰 폭의 수출 감소를 기록

- 수입은 국내 생산 위축과 가동률 하락으로 원자재 및 중간재 수입의 필요성이 낮아져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이다가 10월에 연중 최대 폭인 11.6% 감소를 기록

□ 정부는 국내 나프타분해설비(NCC) 생산능력 1,470만 톤의 18~25%(연 270만~370만 톤) 감축을 목표로 제시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 발표(2025. 8. 20)

- 국내 8개 주요 석유화학 기업의 2025년 실적 영업손실은 1조 5,000억 원 수준(2024년 1조 1,000억 대비 적자폭 확대)

- 대산, 여수, 울산 중 제일 먼저 대산에서 롯데케미칼이 110만 톤 규모의 NCC 가동을 중단하고 HD현대케미칼(85만 톤)과 합작사 형태로 통합 운영하는 사업재편 방안 제출

- 석유화학 사업재편과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석유화학특별법') 제정안이 12월 2일(화) 국회 본회의 통과

- △ 사업재편계획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교환 허용,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 행위 승인,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석유화학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3	2024	2025				
		연간	연간	연간	1/4	2/4	3/4	4/4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9.6	2.2	-2.0	-0.5	-2.7	0.2	-5.3
	생산(전기비)	-	-		-3.4	0.0	1.5	-2.5
	출하	-4.9	2.7	-1.5	-0.6	-0.4	0.0	-4.7
	재고	-5.8	1.4	1.1	3.8	-1.9	-2.6	1.1
	가동률	-9.1	1.6	-3.3	-2.4	-4.9	-1.4	-4.6
교역 동향	수출	-15.9	5.0	-11.4	-7.1	-14.8	-9.4	-14.3
	수입	-15.2	2.0	-4.6	0.4	-7.5	-5.4	-4.5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4분기 생산동향은 잠정치.
2) 생산통계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수출입 통계는 '석유화학 제품'(MTI 21) 당월.

기업 결합을 하는 경우 기업 결합 심사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도입, △ 세제·재정·R&D·인력 양성·고용 안정 등 지원, △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등에 대한 특례 추진, △ 원가 절감을 위한 연료 공급 특례

박유미 | 산업탄소중립연구실 연구원

7. 섬유

□ 2025년 섬유산업은 생산, 수출 부진 지속

- **2025년 섬유산업은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경제 성장세 둔화에 따른 소비 위축 및 베트남 등 생산기지의 섬유소재 수요 위축으로 수출이 지속 감소하고, 수입 중심의 내수 성장으로 부진이 장기화**

- 2025년 국내 생산 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범용 원사 및 생지의 수입 의존도 심화, 완제품의 수입 급증 등으로 섬유 업황의 전반적인 부진이 지속

- **2025년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생산은 전년비 1.2% 감소**

- 국내 생산 경쟁력 열위로 미국, EU 등 주요국의 의류 오더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로 선회

- 범용 제품의 가격 경쟁력 제고 목적의 해외 생산 지속 확대 및 역수입 증가

- 면방업계는 전기세 등 유틸리티 비용 증가로 베트남 등 해외 생산 확대

- 공급망 리스크 등에 대비한 니어쇼어링 지역인 중남미, 미국의 우방국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베트남 및 멕시코 등지로 해외 생산 확대

- 시장 접근성을 고려한 스판덱스의 중국 생산 확대, 베트남·브라질·터키 증설 등으로 국내 생산 감소

섬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3	2024	2025				
		연간	연간	연간	1/4	2/4	3/4	4/4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2.8	-6.3	-1.2	-3.9	-3.2	3.4	-0.9
	생산(전기비)	-	-	-	-2.0	-3.5	0.4	1.0
	출하	-11.1	-7.2	-2.6	-4.2	-4.1	0.3	-2.3
	재고	-10.8	-4.8	-3.3	-0.6	0.1	1.1	-3.3
	가동률	-5.6	-2.1	-6.1	-2.5	-9.0	-2.1	-10.0
교역 동향	수출	-11.3	-4.1	-7.5	-8.1	-8.4	-3.6	-9.6
	수입	-5.2	2.0	-1.1	-0.3	-0.5	-1.4	-2.1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4분기 생산동향은 잠정치.
2) 섬유, 의류, 화학섬유 기준임.

- 반면 디지털 전환 강화, 친환경 트렌드 대응 제품 생산 및 투자 확대, 고기능성 섬유소재 생산 확대 등은 생산 증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2025년 섬유산업의 수출은 전년비 7.5% 감소한 96억 8,000만 달러, 수입은 1.1% 감소한 190억 5,000만 달러를 기록, 연간 무역수지 적자는 93억 7,000만 달러에 이름.**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른 글로벌 경기 부진 및 미국 내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저하로 대세계(-7.5%) 및 대미(-5.0%) 수출 부진

- 러-우 사태 지속, 이-팔 전쟁 등 불확실성 병존, 주요 수출국인 미국 및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은 민간 소비를 위축시켜 의류 및 의류용 소재 수요의 둔화 요인으로 작용

- 화섬사의 범용 원사 사업 철수로 수요산업인 원사·직물 업체의 연쇄적 생산·수출 감소

- 수요가 줄어든 글로벌 시장의 경쟁 심화로 글로벌 바이어의 수출 단가 인하 압력 및 유가 하락에 따른 제품 단가 하락 압력은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

- 미·중 분쟁 및 주요국의 대중국 디커플링 강화, 중국 내수 부진 등으로 판로가 막힌 중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 판매 증가로 수출 시장 잠식

- 수입은 가계 부채 누적에 따른 민간 소비 여력 위축, 해외 직물 바이어의 원산지 증명 요구 등 비관세 장벽 강화 등에 따른 수입 원사 투입 자제로 소폭 감소

- **2025년 내수는 국내 섬유 생산활동 저하에 따른 섬유소재 내수 부진, 가계 부채 누증에 따른 소비 여력 감소, 수출용 섬유 소재의 수요 위축 등으로 소폭 감소**

- 가계 부채 누증에 따른 민간 소비 여력 축소로 의류 및 의류용 소재 수요 위축,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한 부직포 등 건자재용 섬유 수요 제한

이임자 | 산업탄소중립연구실 연구위원

8. 무선통신기기

□ 2025년 무선통신기기산업은 수요 위축으로 수출과 생산이 전년 수준에 머물며 부진

- **AI 스마트폰 신제품 중심의 교체 수요가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 요인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하반기에 수출이 부진**

- 2025년 수출은 상반기에 전년동기비 8.5% 증가했지만, 하반기에 글로벌 수요 회복 지연의 영향으로 5.1% 감소했으며 연간 기준으로는 0.4% 증가

- 스마트폰 시장은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프리미엄 폰으로의 교체 수요가 성장 동력이 되었지만, 미국 관세정책과 공급망 재편 이슈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2025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율에 대해 카운터포인트(2026. 1. 12)는 기존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2% 수준으로 전망했으며, 옴디아(2026. 2)도 약 2% 수준으로 전망

- 품목별로 2025년 스마트폰 완제품 수출은 해외 생산 구조에도 불구하고 18.7% 증가했지만, 스마트폰 부품 수출은 39.5% 큰 폭 감소

  * 스마트폰 부품 수출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통상환경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수요 위축 및 공급망 구조 변화 이슈 등으로 인해 큰 폭 감소

- **2025년 4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비 0.6% 증가한 가운데, 애플과 삼성전자가 각각 1,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가트너, 2026. 1. 19)**

- 2025년 연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기준으로도 애플(20%)과 삼성전자(19%)가 각각 1,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샤오미(13%), 비보(8%), 오포(8%) 순으로 예상[1)]

  * 애플은 2025년 신흥 시장 및 중급(mid-size) 스마트폰 시장에서 입지가 확대되었으며, 삼성전자는 중급 스마트폰 수요 외에 AI 스마트폰 및 폴더블 시장에서의 성장이 긍정적으로 작용

- 2025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약 12억 7,000만 대)에서 폴더블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약 3%로 낮지만 향후 시장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2)]

  * 폴더블폰 출하량 중 북타입(Book-Type) 비중이 2025년 52%에서 2026년 65%로 확대될 예정이며, 2026년 하반기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폴더블폰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

- **2025년 국내 스마트폰 내수는 생성형 AI 기능 탑재 스마트폰 및 폴더블폰 교체 수요에 힘입어 전년 대비 8~10% 정도 성장한 것으로 추정**

- 가트너(2025. 12. 17)에 의하면 2025년 국내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약 8.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IDC(2025. 12)는 약 10% 성장한 것으로 예상[3)]

1) Counterpoint(2026. 1. 12), "Global Smartphone Shipments Grew 2% YoY in 2025; Apple Emerged as Market Leader".
2) Gartner(2025. 12. 17), "Forecast: PCs, Tablets and Mobile Phones, Worldwide, 2023-2029, 4Q25".
3) 2025년 한국 스마트폰 분기별 출하량 성장률(IDC): 1분기 1.8%, 2분기 10.9%, 3분기 19.7%, 4분기 보합세 전망.

무선통신기기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3	2024	2025				
		연간	연간	연간	1/4	2/4	3/4	4/4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5	5.0	-0.5	10.7	8.5	-12.1	-2.5
	생산(전기비)	-	-	-	-4.0	-7.4	9.9	1.7
	출하	-1.5	5.0	-2.0	7.5	5.3	-11.1	-5.5
	재고	18.5	-18.7	28.6	-21.2	-10.4	-1.8	28.6
	가동률	-9.1	9.4	7.0	23.6	18.6	-9.5	6.1
교역 동향	수출	-10.2	11.1	0.4	8.0	9.1	-12.7	2.6
	수입	-9.6	-4.6	2.4	-12.2	-0.4	17.4	2.9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2025년 4분기 및 연간 생산동향은 잠정치.

* 2025년 7월 단통법 폐지에 따른 이동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 심화와 이로 인한 교체 수요 증가도 스마트폰 내수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업체별 시장점유율은 2025년 1~3분기 출하량 기준 삼성전자가 78.1%, 애플이 19.6%를 차지(가트너, 2025. 11)

* 중국 샤오미는 현재 국내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이 1% 미만 수준이지만 2025년 1월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최초로 운영 매장을 열면서 국내 시장 진출을 본격화

- **2025년 생산은 내수 확대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세계 스마트폰 및 부품 수요 위축의 영향으로 감소했으며, 연간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0.5% 감소**

- 2025년 하반기에 세계 스마트폰 수요 회복 지연으로 수출이 감소하면서 연간 출하량이 전년 대비 2.0%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재고는 28.6% 증가

- 가동률은 7.0% 상승했는데, 이는 해외 생산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도 국내에서는 AI 스마트폰 및 폴더블폰 등 고가 신제품 중심의 생산이 이루어진 데 기인

김종기 | AI디지털전환연구실 선임연구위원

9. 가전

□ 2025년 가전산업은 미국 관세와 국내외 수요 둔화로 생산·수출 부진

- **생산은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하면서 전년비 3.9% 감소**

-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이 감소하면서 생산은 감소로 전환

- 내수 규모는 2022~2025년 기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고, 이는 국내 생산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가전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3	2024	2025				
		연간	연간	연간	1/4	2/4	3/4	4/4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0.4	3.4	-3.9	0.3	-6.0	2.3	-11.5
	생산(전기비)	1.1	3.2	-3.6	0.2	-7.5	4.4	-6.3
	출하	3.3	-4.6	-2.4	-0.1	-3.6	1.0	-6.8
	재고	-7.9	7.7	1.6	8.6	1.8	3.9	-6.8
	가동률	-1.8	4.4	-3.2	-0.2	-8.2	3.1	-7.1
교역 동향	수출	-1.0	0.4	-8.8	-9.7	-11.6	-5.1	-8.5
	수입	-5.0	2.8	-1.1	0.7	-2.4	2.6	-4.8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부, "수출입동향".
주: 1) 4분기 생산동향은 잠정치.
2) 가전산업의 범위는 영상음향기기, 생활가전(가정용 기기), 조명기기.

- 영상음향기기 분야는 기저효과 영향으로 전년비 양호한 흐름을 보였으나, 국내 가전 생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활가전 생산이 크게 감소하여 전체 가전 생산도 감소를 기록

- 조명기기는 4분기 생산이 전년동기비 부진했으나 차량용 제품 등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양호한 수준

- 가동률은 전년비 3.2% 하락했으나 생활가전 중심으로 판매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재고는 전년비 1.6% 증가

• **수출은 미국 관세 조치와 선진국 중심의 글로벌 수요 둔화, 해외 생산 확대로 전년비 8.8% 감소**

- 미국의 상호관세(15%), 철·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50%)가 현실화됨에 따라 대미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냉장고, 세탁기 등의 수출이 급감

- 관세는 미국 내 수요를 위축시키고 관세 면제국인 멕시코에서의 해외 생산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대미 수출에 악영향

- 이에 따라 2025년 대미 수출액은 전년비 22.8% 감소했고 미국이 차지하는 수출액 비중도 2024년 48.5%에서 2025년 41.1%로 감소

- 최대 수출국인 대미 수출이 크게 감소한 반면 중국, 베트남, 멕시코 수출액은 각각 6.8%, 13.2%, 4.8% 증가

- 최대 수출 품목인 냉장고, 세탁기 수출이 각각 26.3%, 4.5% 감소하고 기타 조명기기, 비디오 카메라, 난방 및 전열기기 부품, 컴포넌트 등의 수출은 증가

- 이는 대형 가전 위주의 프리미엄 제품 수출이 감소하고 부품 또는 소형·중저가 제품 수출이 증가했음을 시사

• 수입은 전년비 1.1% 감소했으나 수출 대비 비교적 작은 감소폭을 나타내 무역수지 적자가 더욱 심화

- 내수 부진 영향으로 수입도 감소세를 보였으나 가성비가 높은 중국 제품 수입 증가와 국내 기업 제품의 역수입으로 감소폭은 낮은 편

- 중국 주요 브랜드의 국내 시장 진입이 확대되면서 최대 수입국인 대중국 수입이 전년비 1.4% 증가했고,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 거점인 태국, 멕시코에서의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

- 품목별로는 기타 가정용 전자, 기타 조명기기, 컬러 TV 등의 수입이 감소했으나 진공청소기(중국 브랜드), 비디오카메라, 세탁기, 컴포넌트, 에어컨 등은 증가

심우중 | AI디지털전환연구실 전문연구원

10. 반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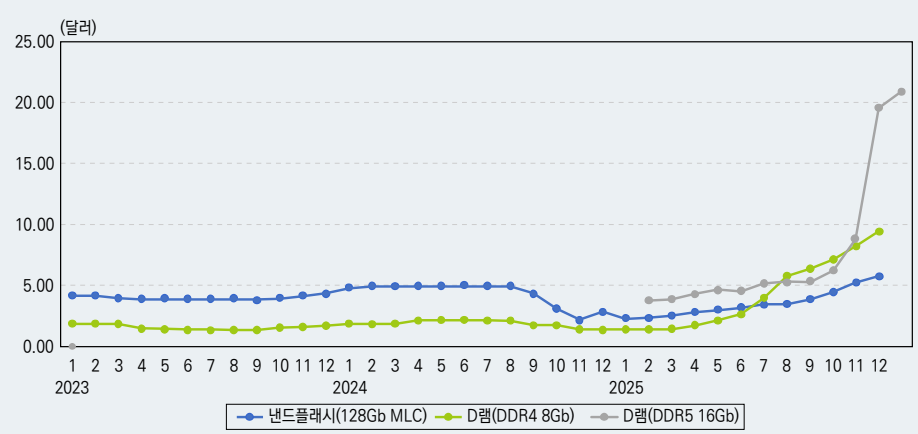
□ 2025년 반도체산업은 상반기에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다가, 하반기에는 급성장하여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

• 상반기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비 11.4% 증가한 732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하반기에는 31.4% 증가한 1,001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

- 상반기 수출은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하반기에는 2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여 역대 최고 수출 기록 달성

* 상반기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AI 관련 투자 확대로 고가의 HBM 매출 상승과 메모리반도체 단가가 안정세를 보이며 수출이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메모리반도체 단가가 폭등하면서 반도체 수출이 대폭 증가

메모리반도체 고정 거래가격 추이



자료: IITP, 산업통상부 등.

반도체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3	2024	2025				
		연간	연간	연간	1/4	2/4	3/4	4/4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2.0	20.4	13.2	15.9	18.3	21.8	-0.9
	생산(전기비)	-	-	-	4.4	4.0	3.7	-12.6
	출하	8.9	16.3	11.0	12.2	15.3	17.5	0.2
	재고	7.2	-31.0	-31.5	-26.2	-25.5	-20.0	-31.5
	가동률	-10.2	12.1	1.9	8.5	6.6	3.0	-9.5
교역 동향	수출	-23.7	43.9	22.2	6.0	16.2	26.6	36.0
	수입	-16.6	15.8	4.9	8.5	6.2	4.1	1.7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부, "수출입동향".
주: 4분기 생산동향은 잠정치.

- 중국 기업의 범용 메모리반도체 시장 확대와 함께 우리 기업이 HBM 등 고가의 메모리반도체 생산에 집중하기 위해 범용 메모리반도체 생산을 축소함에 따라 DDR4와 DDR5의 공급이 줄어들어 단가가 상승

  * 범용 메모리반도체의 단가 상승에 따라 수요 기업의 재고 확보를 위한 경쟁적인 가수요(선제적 재고 확보)가 단가 상승에도 영향

- **하반기에는 국내 기업의 생산설비 확충 속도보다 수요 증가 속도가 더 빨라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

- 2023년 글로벌 반도체 불경기 영향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신규 생산설비 투자가 신중해진 한편, 글로벌 수요는 계속 늘어나면서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

  * 코로나19 시기에 늘어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업은 생산을 확대하였으나, 2023년에 수요가 급감하면서 적자 발생

  * 따라서 2024년부터 점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었으나, 2023년의 불경기 경험과 트럼프 정권의 불확실한 반도체산업 정책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은 투자에 신중

- **2023년 불경기 이후 한국 반도체산업은 2024년에 폭발적인 성장을 거두었으며, 2025년에도 성장세가 지속**

- 2025년 생산과 출하, 가동률이 전년비 각각 13.2%, 11.0%, 1.9% 증가하고 재고가 31.5% 감소하여, 이는 수요 확대에 따른 정상적 회복 국면으로 평가

  * 다만, 생산과 가동률 모두 3분기까지는 전년동기비 증가하였으나, 4분기에는 감소하고 있어 일시적인 하락 현상인지 경기가 정점에 달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적 관찰이 필요

- 2025년 4분기 생산과 출하 등이 하락하였으나 수출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고부가 제품의 매출 확대와 범용 메모리반도체의 수급 불일치에 따른 단가 상승 때문

  * 생산과 출하가 소폭 감소하더라도 메모리반도체 고정 거래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가격 효과가 물량 효과를 상회함으로써 한국 반도체 수출은 당분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김양팽 | 경제안보·통상연구실 전문연구원

산업 트렌드 및 기업 전략 인사이트

1. 반도체산업

(1) 이슈로 보는 반도체산업 트렌드

□ 글로벌 산업 현황 및 이슈

-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상시화되고 반도체가 경제·안보의 핵심 품목으로 주목받으며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 미국은 첨단 반도체를 비롯하여 제조 장비와 첨단 전자 통신기기 등을 대상으로 대중국 수출 통제 체계를 고도화하여 중국의 첨단 기술 개발 속도를 제약

-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우회경로를 확보하거나 대체 조달 및 자립화 강화로 미국의 통제에 대응하면서 양국 간 전략적 상호 대응이 구조화

-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반도체를 산업이 아닌 안보로 취급하면서 보조금, 관세, 투자 심사 등 경제·안보 관련 정책 수단이 확대

- 미국 주도의 공급망 협력 구상이 확대되면서 동맹국 중심의 분업체계 구축이 가속화되고 있고, 중국은 자립화를 더욱 강조하고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

- **반도체는 PC, 스마트폰 그리고 서버가 주요 수요 시장이었으나, 최근 AI 기술의 급발전과 투자 확대로 인해 AI가 반도체 시장을 재편**

- 2025년 하반기 들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급성장하였는데, 이는 전통적인 PC와 모바일 중심의 수요가 AI 인프라 중심으로 이동했음을 의미

-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CPU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GPU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범용 제품보다 고부가 제품인 HBM을 핵심 부품으로 채용

- AI 관련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는 반면, PC와 스마트폰 등 기존의 주요 산업 회복은 완만하게 진행

- **빠른 기술 변화로 인해 미세화 공정 전환뿐만 아니라 전력 관련 기술과 첨단 패키징 등 다양한 기술이 반도체산업의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

- 5nm 이하 첨단 반도체 개발은 수율의 안정화와 설계 생태계, 첨단 장비 도입 여부가 실질적인 격차를 결정

- 첨단 제조공정으로 갈수록 소수 기업 중심의 과점 구조가 강화되어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의 존재감이 더욱 부각

- 반도체는 생산과 소비 단계에서 모두 효율적인 전력 관리가 중요하고,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부상

□ 경쟁국의 산업 동향

- **미국은 리쇼어링을 강조하면서 동맹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구축**

- 트럼프 2기 정부가 시작된 이후 반도체도 관세 협상에서 자주 언급되었고 동맹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실질적으로 통제

- 바이든 정부는 자국 내 반도체 제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에 보조금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비난하면서 보조금 지급보다는 관세를 통한 압력 행사를 추진

-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정책으로 인해 동맹국들은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

- **중국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장기화함에 따라 제3차 빅펀드 조성과 15차 5개년 계획을 통해 반도체 자립화를 강력하게 추진**

- 2024년 중반 출범한 3차 빅펀드는 이전 기수보다 훨씬 거대한 규모인 약 3,440억 위안으로 장비·소재·핵심 부품(국산 대체) 등 '병목 구간'을 겨냥한 투자 확대

- 중국의 정책 목표는 단기간에 첨단 제조공정을 따라잡기보다, 해외 통제로 막히는 구간(장비·부품·소재·EDA/설계 생태계 일부)에서 대체 가능성을 높이는 반도체 공급망 자립화에 초점

- 15차 계획 제안에는 집적회로(IC)와 첨단 제조장비를 포함한 전 공급망에서 '결정적 돌파 및 획기적 진전'을 위해 '비상(특별) 조치'를 취한다는 메시지가 반복

□ 반도체산업의 핵심 리스크 요인

-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장기화함에 따라 정치적인 선택의 압박이 증가**

- 미국의 수출 통제와 동맹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추진되고 있으며, 중국의 자립화 전략으로 인해 기술 이전과 시장 접근 및 조달 등에 있어 기존과는 달리 선택의 압박이 증가

- 중국은 한국 반도체의 주요 수출국이자 유일한 해외 생산 거점이 있는 국가이므로, 정책 변화에 따라 실적 변동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자유무역주의가 약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공급망 리스크 확대 가능

– 국내 반도체 제조장비 기업들의 기술력 향상으로 일부 장비는 국산화율이 높아졌으나, 노광, 식각, 검사 등 핵심 장비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고 소수 국가에 의존하고 있어 지정학적 변수 발생 시 도입 지연 혹은 비용 상승 리스크가 존재

□ 정책적 시사점

-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상시화된 만큼 반도체를 산업정책이 아닌 경제·안보 전략 산업으로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상·외교·산업 연계 전략 필요

–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선택 압박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다변화된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

– 중국은 최대 수출 시장이며, 주요 생산 거점으로 국내외 정책 변화에 따른 충격 시나리오를 사전에 점검하고, 중국 내 생산 시설의 전략적 기능을 재정비

-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인프라 구축을 통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유지 및 강화

– 노광, 식각 등 해외 의존 장비에 대한 장기 구매계약, 다변화 추진 및 전략적 핵심 부품에 대한 충분한 재고 확보와 비상 대응 체계 마련

–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구축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역에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설비투자 세액 공제 확대 및 정책 금융 지원 강화 등으로 국내 반도체 제조 생태계 강화

(2) 기업 전략 인사이트

□ 기업 전략 분석

① 국내 주요 기업의 생산 및 투자 전략

- 메모리반도체 기업은 HBM 중심의 고부가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첨단 패키징 투자 확대 및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R&D에 선제 투자

– AI 서버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HBM 생산 능력을 대폭 확충하고 범용 메모리반도체 대비 고수익 제품 비중 확대를 통한 수익성 확보

– HBM은 기존의 메모리반도체와 달리 후공정 역량이 경쟁력을 좌우하므로 첨단 패키징 공정의 내재화 및 대규모 전용 라인 구축을 추진

– 우리 메모리반도체 기업은 선단 기술을 주도하며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전략을 유지하여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규격을 선점하고, AI 시스템과 첨단 제품 등에 필요한 저전력·고집적 설계 기술을 확보하여 메모리반도체 경쟁우위를 공고히 할 필요

- **파운드리 기업은 초미세 공정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기술 개발을 하면서 고객 및 글로벌 생산 거점을 다변화**

- 최근 TSMC뿐만 아니라 일본의 라피더스도 2nm 양산을 발표하는 등 초미세 공정 경쟁이 가열화하고 있으므로, 우수 고객 확보를 위해서는 초미세 공정 경쟁에서 기술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

- 첨단 제품을 주문하는 우수 파운드리 고객층이 모바일을 포함한 웨어러블 기기 설계 기업 중심에서 AI 가속기, 자율주행 자동차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고객 다변화 전략을 추진

- 반도체가 경제·안보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추구하기 위해 주요국들이 자국 내 생산을 추진함에 따라 통상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글로벌 생산 거점의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내 투자와 해외 생산을 병행하는 이중 전략을 추진

- **팹리스 기업은 기술 고도화와 차별화를 통해 특화 기술 기반의 글로벌 연계형 설계 플랫폼으로 전환**

- 미국의 대기업이 이미 시장을 장악한 범용 CPU, GPU 중심의 정면 경쟁을 지양하고, AI 특화·자동차·산업·국방 등 고부가가치 니치 시장에 집중

- 파운드리와의 공동 설계(Co-Design) 체계 구축 및 첨단 패키징·칩렛 생태계 참여를 통해 제조와의 전략적 연계 강화

- 중소형 팹리스 간 전략적 제휴 및 직접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규모의 경제와 시장 다변화 추진

- **반도체 소부장 기업은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적극적인 해외 진출 전략 추진**

- 해외 의존도가 높은 노광, 식각 등의 일부 장비 분야에 대한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민·관 협력체 구성을 통한 원천 기술 확보

-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은 국내 대기업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리스크 관리와 수익 증대 차원에서 글로벌 고객을 확보하여 매출 구조를 다변화

②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구조적 혁신

- **AI 시대에 대응하여 메모리반도체와 AI 가속기 통합 생태계를 강화하고 전력 효율 중심의 반도체 설계 혁신 추진**

- AI로 인해 변화하는 반도체산업 생태계 구조에 맞추어 HBM과 GPU, NPU 등의 생태계 연계를 강화하고 고객사와 공동 개발 확대

- 향후 반도체 기술의 핵심으로 예상되는 저전력 공정 기술을 확보하고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 절감 솔루션을 개발

- **메모리반도체 중심의 구조에서 확장하여 시스템반도체 분야도 확대하고 자동차 및 전력 반도체 분야도 강화**

- 팹리스 육성 및 첨단 반도체 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이미지 센서, 차량용 반도체 등 특화 분야에 집중

-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 확산에 따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용 반도체 및 SiC(탄화규소), GaN(질화갈륨) 등 차세대 전력 반도체 분야에 투자 확대

③ 기업 간 협력 및 생태계 조성 노력

- **기술 협력 프로그램 확대와 금융과 구매 연계 지원을 통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모델 구축**

- 반도체 제조공정의 복잡성과 비용 문제로 인해 소부장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실증 기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대기업-소부장 기업과의 공동 R&D 추진으로 대기업이 테스트베드 공유 및 인증 지원

- 대기업-중소기업 간 장기 계약 체결을 통해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고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업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산학연 협력 강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

- 기업은 만성적인 반도체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대학 등과 연계하여 반도체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현장 실습 중심의 교육을 강화

- 차세대 공정 및 패키징 기술의 공동 개발을 위해 산학연 공동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정부 연구비와 기업의 투자를 연계

□ 정책적 시사점

- **AI 중심 산업 재편에 대응하여, 정부 차원에서 메모리·파운드리·팹리스·소부장 등 전 분야를 연계한 '통합형 반도체 생태계 전략'을 추진**

- AI 시대에는 메모리와 가속기, 패키징과 설계, 대기업과 팹리스·소부장 간 협력이 경쟁력을 좌우하므로, 정부 정책은 단순 보조금이 아닌 공동 R&D·테스트베드 공유·장기 구매 연계·인력 양성을 포함한 통합 패키지 방식으로 추진

김양팽 | 경제안보·통상연구실 전문연구원

2. 조선산업

(1) 이슈로 보는 조선산업 트렌드

□ 글로벌 산업 현황 및 이슈

- **IMO(국제해사기구)의 탄소중립을 위한 규제인 중기조치(Mid-term Measure) 채택 연기로 시장 불확실성 확대**

– 2025년 4월 IMO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3차 회의에서 중기조치에 대한 개정안은 승인됐으나, 10월 임시 특별회의(MEPC ES.2)에서 채택에 대한 투표가 연기되면서 IMO의 국제해사 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워질 우려

– EU의 ETS와 FuelEU Maritime 규제는 각각 2024년, 2025년에 시행되어서 해운사의 친환경 연료 전환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EU 규제보다는 IMO의 중기조치가 더 강력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운사의 투자 관망세 지속 가능성

- **미국의 중국 조선해양산업에 대한 견제와 조선산업 재건 노력**

– 중국의 해상 패권 확대에 대한 우려로 미국 해양산업을 재건하고 중국 조선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며[4], 무역대표부(USTR)는 입항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2025년 11월 10일부터 1년 연기

– 2026년 2월 13일 백악관은 “America’s Maritime Action Plan”을 발표[5]했는데, 미국 조선산업 재건, 해양 인력 지원 및 육성, 해양산업 기반 보호, 국방과 경제 안보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

– 조선산업 재건에는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에서 초도선을 건조하고 후속선은 미국에서 건조한다는 “브리지 전략(Bridge Strategy)”과 해양산업 기반 보호에서는 중국의 공급 과잉에 대응하고 한국·일본과 미국 조선업 재건 협력을 언급

□ 경쟁국의 산업 동향

- **중국은 CSSC, CSIC 합병을 마무리하고 고부가가치 선박 영역에서도 우리나라를 추격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친환경·디지털 전환 가속화**

– 2025년 9월 중국 국영조선사인 CSSC와 CSIC의 합병이 마무리됨에 따라 세계 최대의 조선 그룹사가 탄생하면서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달성

4) The White House(2025. 4. 9), “RESTORING AMERICA’S MARITIME DOMINANCE”.
5) The White House(2026. 2), “America’s Maritime Action Plan”,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6/02/Restoring-Americas-Maritime-Dominance.pdf (접속일: 2026. 2. 20).

- CSSC는 해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함뿐만 아니라 LNG운반선, 크루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안정적 건조, 글로벌 서비스 브랜드·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출시를 통한 생애주기 서비스 시스템 구축, 스마트공장 전환 등 추진

- 2026년에는 산업 고도화, 고기술 자립, 가치 창출, 디지털 전환 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전망[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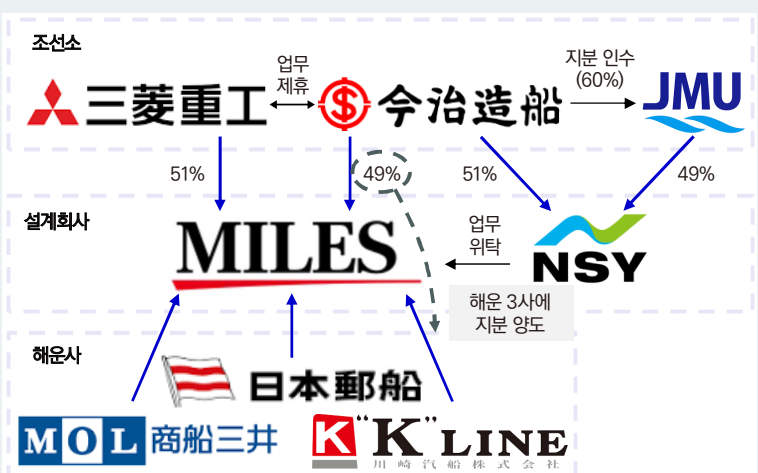
- **일본은 우리나라와 중국에 뒤처진 조선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국가적 투자와 민간의 합병-연합을 지원하고 미·일 조선 협력을 위한 노력 추진**

- 일본은 안보 강화의 필요성 증대 및 동맹국과의 협력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조선업 재생을 위한 로드맵을 설정하고 2035년 1,800만GT 건조(2025년 현재 약 900만GT), 차세대 선박 주도를 목표로 조선산업에 1조 엔 규모를 투자할 계획

- 2026년 2월에는 구체적인 선종으로 일본의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LNG운반선 부활, 무탄소선박 개발, 미·일 조선 협력을 위해 일본에서 건조해야 하는 선박 등 주력해야 할 주요 선종을 검토했으며, 인재 확보, 산업생태계 유지·강화(예. 수리조선 중국 의존 해소), 국제협력 등에 대해 검토[7)]

- 한편 2025년 12월, 미쓰비시중공업과 이마바리조선의 공동 설계회사인 MILES[8)]에 일본의 해운 대기업 3사가 출자하여 조선과 해운 산업이 협력하여 새로운 선박을 개발하고 설계하는 구조를 구성

일본 조선사 및 해운사의 협력 구조



자료: 국토교통성해사국(2026. 2), "将来の建造需要への対応(連携の在り方等)", p. 10.

6) CSSC 홈페이지, 2026년 신년사, http://www.cssc.net.cn/n5/n18/c33265/content.html(접속일: 2026. 2. 20).
7) 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https://www.mlit.go.jp/maritime/maritime_tk5_000090.html(접속일: 2026. 2. 20).
8) Marine-design Initiative for Leading Edge Solution

- 일본 조선업에서 상선 건조는 JMU를 인수한 이마바리조선(今治造船)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마바리조선과 JMU의 영업·설계를 위한 합작사인 NSY(Nihon Shipyard)가 MILES에 설계를 위탁하는 형태

- 미쓰비시중공업과 이마바리조선은 LNG운반선 협력을 위해 2013년에 MI-LNG를 설립했는데, LNG운반선뿐만 아니라 무탄소선박, LCO_2운반선 등 차세대 선박의 협력을 위해 2025년 MILES로 사명을 변경하고 영역을 확장

□ 조선산업의 핵심 리스크 요인

- **가격·생산능력 우위 및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중국의 양적 우위 지속과 LNG운반선의 질적 격차 축소로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기반 유지 불확실성이 증대**

- 2024년 중국은 70.6%의 수주 점유율로 시장을 지배했으며, 2025년에는 세계 발주 감소로 인한 수주 물량의 감소에도 62.8%의 높은 점유율을 유지

- 2025년 발주된 대형 LNG운반선(140,000Cbm 이상)은 총 37척으로 한국 32척, 미국(한화필리조선소) 2척, 중국 3척으로 한국이 압도했으나, 2026년 1월 27척의 대량 발주에서 중국이 18척, 한국 9척 수주로 중국이 우위[9)]

-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안정적 수주 기반이었던 LNG운반선 시장도 중국에 급격히 잠식당하고 있어, 중국 조선업이 양적 우위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우리나라 조선산업을 크게 추격한 것으로 추정

-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수익성이 좋은 수주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결과적으로 내국인 숙련공 유지, 기술 개발 및 국내외 조선산업 투자 등이 어려워질 우려

- **한·미 조선 협력을 비롯한 해외 진출의 불확실성**

- 조선업은 기술(설계, 생산)뿐만 아니라 인력, 금융, 조선기자재 생태계, 자연환경 등 모든 경쟁력을 갖추어야 성공할 수 있는데, 한·중·일을 제외하면 경쟁력이 부족하여 해외 진출 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사업 실패 위험이 큼.

- 또한 조선 협력이 빠르게 이루어지더라도 수주에서 생산까지 시간도 소요되고 단발성의 협력 프로젝트는 성과 창출도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선 협력을 위해서는 국내 조선사가 안정적인 물량과 수익성 확보가 가능해야 함.

- 따라서 구체적이면서 미래 수익 확보가 가능한 안정적인 협력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지 않는다면, 해외 진출에서 조선사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

□ 정책적 시사점

- **조선산업뿐만 아니라 해운산업도 우리나라의 안보 산업으로 설정하고, 국방·경제 안보에 필요한 선박은 국내에서 건조할 수 있는 기반 마련**

9) 클락슨 리서치 WFR DB 2026년 2월 20일 기준으로 신조 Option 물량 포함.

- 2023~2025년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중국 조선사에 신조 물량의 42.0%를 발주했는데, 중국의 낮은 선가, 선박금융 지원, 국내 중소 선박 및 저부가가치 선박 건조 기반이 부족했기 때문[10)]

- 미국의 해양산업 보호 및 재건, 일본의 조선업 재생에서와 같이 해운산업도 국방·경제 안보의 핵심이며, 자국의 수요를 기반으로 조선산업도 보호가 가능

- 따라서 우리나라 국방·경제 안보에 필요한 선박을 국내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선가 보전, 선박금융 지원 및 중소·저부가가치 선박 건조 기반 재건 필요

- **대중국 경쟁 전략 수립 및 한·미 조선 협력의 성과 창출**

- 중국과의 기술격차 축소에 대비하여 원천기술 확보와 미래 선박을 위한 기술 개발과 실증

- 국내 조선사가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기술 개발과 사업 확장을 할 수 있도록 한·미 조선 협력의 사업 구체화와 빠른 추진

(2) 기업 전략 인사이트

□ 기업 전략 분석

- **우리나라의 주요 조선 기업은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중국이 접근하지 못하는 시장의 진출, 원가 절감을 위한 글로벌 협력, 고기술·생산성 향상 추진**

- (시장 차별화) 한·미 조선 협력, 해외 특수선 및 조선산업 육성 협력

- (저원가 생산) 베트남, 필리핀, 인도 등 저임금 국가와 생산 협력

- (고기술·생산성 향상) 친환경·디지털 기술 선도 및 AI를 활용한 디지털 조선소 구축, 원하청 상생 노력을 통한 국내 생산 기반 유지

- **(한·미 조선 협력) 대미 직접 투자, 주요 기업 간 협력 추진과 미 해군 MRO 사업 확대를 위한 인증 취득 및 수주 등 중국과 경쟁하지 않는 미국 시장 진출**

- (한화오션)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 호주 오스탈 지분 인수 등을 통해 미국 조선소에 직접 투자를 진행하여 미국 현지에서 선박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미국에 한화쉬핑을 설립하여 필리조선소에 선박도 발주

- (HD현대) 미국 헌팅턴잉걸스인더스트리와의 협력을 통해 차세대 군수지원함 공동 건조, 미국 내 생산기지 공동 투자 등을 추진하는 한편, ECO와의 상선 협력, 안두릴사와의 무인수상정 개발, 팔란티어와의 AI 조선소 구축 등 협력도 추진

- (삼성중공업) 특수선은 미국 비거마린과 협력, 미국 나스코·한국 디섹과 함께 조선사업 협력을 추진하고 미국 콘래드와는 상선(LNG-BV) 협력 추진

10) 이은창(2026. 1), "조선산업 수주분석", 「KIET 산업동향 브리프」, No.196, pp. 52-54.

HD현대 해외 사업 추진 현황과 전략



자료: HD한국조선해양(2025. 8. 27),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 합병 및 사업재편 발표", p.15.

- (국내 미 해군 MRO 사업) 한화오션·HD현대뿐만 아니라, HJ중공업도 MSRA(미국 함정정비협약)를 취득했으며, 삼성중공업, SK오션플랜트, K-조선도 취득할 예정이어서 국내 조선사의 미 해군 MRO 사업의 국내 수행 확대 기대

- (HD현대) 한·미 조선 협력 및 미 해군 MRO 사업 등을 위해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을 통해 국내 특수선 역량을 확대하고, 필리핀 수빅조선소를 활용하여 MRO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

• **특수선 사업 협력 또는 중국이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 진출**

- (HD현대) 페루 SIMA 조선소와 군함 건조 및 잠수함 사업 협력,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와의 IMI 합작조선소를 통한 현지 생산 추진, 인도 코친 조선소와의 협력을 통한 인도 시장 진출

-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캐나다 온타리오 조선소와 전략적 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하여 캐나다 시장 진출 추진

- 그 외에도 국내 조선사는 말레이시아 특수선 현대화 사업, 모로코 카사블랑카 조선소 운영 사업 등을 위해 현지 기업과 협력하거나 수주를 위해 노력 중

- 결과적으로 한·미 조선 협력과 함께 중국이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차별화된 시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

• **범용 상선 및 해양플랜트 시장을 지키기 위한 해외 진출 및 협력**

- (HD현대) 우리나라 조선사 중 해외 조선소로는 유일한 성공 사례인 베트남 조선소를 확장하고 필리핀 수빅 조선소 운영, 인도 코친 조선소와 상선 부문 사업 협력 등을 통해 상선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삼성중공업) 기술력이 필요한 엔지니어링 및 구매는 삼성중공업이 담당하고 생산은 저원가에서 건조가 가능한 HSG성동조선, 중국 팍스오션, 베트남 PVSM, 인도 SWAN 조선소가 담당하는 형태의 협력 추진

- (한화오션) 미국 진출 외에도 2024년에는 해양플랜트 사업 강화를 위해 싱가포르의 다이나맥 홀딩스를 인수하여 생산기지를 확대

- 주요 조선사는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국에서 선체블록을 제작하던 것을 넘어, 한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저원가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

• **친환경·디지털 선박 선도를 통한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생산 현장의 AI·디지털 전환으로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고품질 유지**

- 비록 IMO의 중기조치 채택이 연기되었지만,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으므로 암모니아·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및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활용한 선박까지 무탄소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개발을 지속

- 단기적으로는 로터 세일, 윙 세일 등 풍력을 활용한 에너지 저감 장치의 탑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선상 CCS(탄소포집·저장)에 대한 실증도 지속

- 생산 현장은 숙련공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주요 조선사는 AI를 활용한 용접로봇, 도장로봇 등을 적용하여 자동화 또는 효율성·품질 향상과 숙련 전수를 추진

• **원하청 상생을 통한 숙련공 및 국내 생산 기반 유지**

- 2023년 주요 조선사 원청과 하청 기업은 고용노동부와 '조선업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원하청 상생을 통한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 노력

- 주요 조선사가 본격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시작한 2025년에는 한화오션이 원청과 하청 직원 모두에 성과급을 동일한 비율로 지급했으며, 삼성중공업도 12년 만에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사내 협력사 직원도 대상이 되었으며, HD현대중공업도 사내 협력사에 동종 업계 최대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11)]

□ 정책적 시사점

• **한·미 조선 협력 및 주요 조선사의 해외 진출 지원 필요**

- 2026년은 한·미 조선 협력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 또는 국내 건조·MRO 사업 추진 시 제약이 될 수 있는 미국의 제도적 장벽에 대한 해소가 가능하도록 한국과 미국 정부 간 협의 필요

- 다양한 국가로 진출하는 국내 조선사의 해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국내 조선사에 대한 해당 국가의 경제적·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력

11) EBN(2026. 2. 16), "조선 빅3, 협력사 성과급도 '두둑'…호실적 과실 나눴다",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99857(접속일: 2026. 2. 20).

- **초격차 기술 확보 및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기술 개발·실증, 중견·중소 조선사 및 조선기자재사 투자 지원과 건전한 숙련 유지·전수 기반 마련**

- 우리나라 조선사가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와 조선 협력이 가능한 것은 초격차 기술력을 보유했기 때문이므로 친환경·디지털 선박을 선도하기 위해 국내 발주를 기반으로 기술 개발 및 실증이 필요

- 또한 국내 생산 기반 유지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을 위해서도 AI·디지털 조선소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대형 조선사에 비해 기술력이나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사에 대한 지원 필요

- 중국과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의 높은 변동성의 위험은 있지만, 조선산업의 생산은 협력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생산 현장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건전한 숙련 유지·전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 추진

이은창 | 경제안보·통상연구실 연구위원

국내외 산업정책 인사이트

1. 국내 산업정책 인사이트

(1) 2026년 경제성장전략[12)]

□ 지난 1월 정부는 2026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 원년(잠재성장률+양극화 극복)'으로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하여 발표

- 「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와 양극화라는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 대도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담고 있음.
- 본 전략의 4대 핵심 축은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 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임.
- 아래에서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 중 산업 및 기술 혁신정책과 밀접한 정책들을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국가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 및 구조조정

- 3대 전략산업(반도체·방산·바이오)의 집중 육성

– K-반도체 세계 2강 도약: 대통령 주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2031년까지의 기본계획을 수립,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여 4조 2,000억 원을 지원하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통해 클러스터 조성 시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적용

– 방산 4대 강국 진입: 한-나토(NATO) 방산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유럽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성장군 수요와 연계한 R&D 및 초도물량 양산 지원을 강화, AI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전문교육을 확대하며 국방 반도체·센서 분야 거점대학을 추가 지정

12) 관계부처 합동(2026. 1. 9), "2026년 경제성장전략 -대한민국 경제大도약 원년".

- 바이오 메가 프로젝트: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필두로 신약 허가·심사 기간을 420일에서 240일로 대폭 단축하고,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제고하며, 임상 3상 특화 펀드(600억 원)를 조성하여 글로벌 임상을 지원

• **주력산업(석화·철강)의 고부가 전환 및 사업재편**

- 석유화학 체질 개선: '대산 1호 프로젝트' 등 사업재편 시 자산매각 법인세 과세이연 기간을 연장하고 고부가 전환 자금을 지원, 이차전지 소재 등 신성장 원천기술 지정을 확대하며 AI 활용 공정 혁신을 추진

- 철강산업 고도화: 철근 등 과잉 부문의 감축 로드맵을 제시(2026년 상반기)하고, 수소환원제철 실증 R&D와 특수탄소강 기술 개발을 중점 추진, 제철공정 자율로봇 등 AI 기반의 공정관리 실증 허브를 구축

• **중소·벤처 기업의 글로벌 도약 및 보호**

- 글로벌 도약: 「중소·벤처 해외 진출 촉진법」을 제정하여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500개 기업을 선정해 글로벌 진출 종합 패키지를 제공

- 공정 질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하고, 기술 탈취 기업에 대해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제재 3종 패키지를 시행

□ AX·GX 대전환과 산업 안보 체계

• AI 대전환(AX) 및 피지컬 AI 선도

- AI 혁신 인프라: 민·관 합작 SPC를 설립해 국가 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2028년까지 첨단 GPU를 5만 2,000장 이상 확보하는 'AI 고속도로'를 건설, 양자기술 국가 전략을 수립하여 NEXT-AI 시대를 준비

- 15대 선도 프로젝트: 휴머노이드 플랫폼, 자율운항선박, AI 가전, 스마트 농수산업 선도지구 조성 등 산업 전반에 AI를 접목한 실증 사업을 추진

- 스마트 제조 확대: '제조AI 2030 전략'을 수립하고, 대·중소 상생형 AI 공장 확산(100억 원)을 통해 산업생태계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

• **녹색 대전환(GX)과 에너지 시스템 혁신**

- K-GX 전략 수립: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산업 탈탄소 전환 지원 방안을 담은 전략을 마련,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를 단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경쟁입찰로 일원화하고, 탄소크레딧 거래소를 신설

- RE100 산단 조성: 특별법 제정으로 입주 기업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한도 상향 및 소득·법인세 감면(최대 15년) 등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

- **전략적 경협 및 공급망 안보**

– 한·미 전략 투자: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통해 대미(對美) 투자 2,000억 달러를 지원하며, 함정 MRO 클러스터 및 SMR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

– 국내 생산 및 광물 안보: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여 핵심 전략 품목의 자립화를 지원하고, 핵심 광물 비축량을 최대 1년분으로 확대, 조달청 비축기지를 산단과 연계한 대형 비축기지로 개편

– 전략수출금융기금: 방산·원전 등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기금을 신설하고, 수출 수혜 기업의 이익을 생태계로 환류하는 구조를 마련

(2) 정책적 시사점

- **생산 함수 자체의 고도화: 노동·자본에서 AI·데이터로 전환**

– 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핵심 원인을 노동 기여도 하락으로 진단하고, 이를 AX(AI 전환)를 통한 생산성 혁신으로 돌파하려 함.

– 특히 피지컬 AI 1등 국가 목표는 한국의 강점인 하드웨어 제조 역량에 AI 지능을 결합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전략적 포석임.

- **산업정책과 경제 안보의 결합: 안보적 산업주의**

–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과 핵심 광물 비축 확대,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은 산업정책이 더 이상 경제적 효율성만을 따지는 영역이 아님을 시사함.

–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자국 우선주의에 대응하여 산업생태계의 자립성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척도가 되었음.

- **하향식 구조조정과 상향식 혁신의 조화**

– 석유화학·철강 등 한계 업종에 대해서는 과감한 사업재편 승인과 자산매각 세제 혜택 등 유인책을 통해 질서 있는 퇴로를 마련하고 있음.

– 동시에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는 인허가 타임아웃제와 같은 규제 개혁을 통해 민간의 혁신 에너지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임.

- **거점 중심의 클러스터링: 5극 3특 체제**

–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제안된 지방 전략 산업벨트(반도체, 배터리 등)는 단순한 공장 분산이 아니라, 연구기관·대학·기업이 결합된 완결형 산업생태계를 지향함.

– 이는 향후 산업 입지 분석과 지역 경제 활성화 연구에 가장 중요한 준거 틀이 될 것임.

(3) 기대효과

- **산업구조 변화: AX·GX 중심의 초혁신 체계로의 전환**

- 주력산업의 AI 융합화: 반도체를 필두로 방산, 바이오, 로봇 등 반도체+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산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

- 전통 산업의 체질 개선: 석유화학, 철강 등 기존 주력 산업을 저탄소·고부가 공정으로 전환하여 생존력을 높이고 AX 기술을 접목

- 산업생태계의 분권화: 5극 3특 체제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지도를 지역별 전략산업 벨트로 재편하여 균형 성장을 꾀함.

- **생산성 혁신: AI 인프라와 R&D 체계의 전면 개편**

- AI 기반 생산성 폭발: AI 고속도로와 국가 AI컴퓨팅센터를 통해 산업 전반의 효율을 극대화하며, 중소기업의 AI 스마트 공장을 430개까지 확대

- 임무 중심 R&D로의 전환: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으로 R&D 예산을 확대(35조 5,000억 원)하고, 실패 위험이 크더라도 파격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한계도전 트랙을 신설

- 인적 자본 고도화: 4대 과학기술원과 거점 국립대에 AI 단과대학을 신설하여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AX 핵심 인재를 양성

- **투자 유도 효과: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한 마중물 전략**

- 정부는 직접 투자와 함께 세제·금융·규제 개혁이라는 패키지 지원을 통해 민간 자본의 흐름을 생산적인 영역으로 돌리는 데 집중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투자 유도 효과

	주요 투자 유도 수단	기대효과
금융	3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대한 대규모 자금 공급
세제	국내생산촉진세제 및 국가 전략기술 공제 확대	핵심 전략 품목의 국내 투자 및 유턴 기업 유치 촉진
인프라	20조 원 규모 한국형 국부펀드 신설	공공 자산의 가치 제고 및 신산업 육성 마중물 투자
규제	경제형벌 30% 합리화 및 규제샌드박스 통합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과감한 신사업 진출 유도

이임자 | 산업탄소중립연구실 연구위원

2. 글로벌 산업정책 인사이트

(1)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

- 2025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며 단행한 전 세계 대상 관세정책은 '보편적 기본 관세'와 「상호 무역법」을 축으로 하여 매우 공격적으로 전개
- 2025년 미국의 관세정책은 단순한 세금 부과를 넘어, 전 세계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강제 재편하기 위한 협상용 무기로 활용

– 특히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를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사용한 것은 미 역사상 유례없는 조치였음.

– 관세 부과 전 물량을 미리 확보하려는 조기 선적 현상 덕분에 2025년 세계 경제와 한국 수출은 수치상 양호한 흐름을 유지

– 특히 한국은 10월 협상 타결로 타국 대비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

- 반면 2026년 2월 20일 미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IEEPA 기반의 10% 관세는 사라졌으나, 행정부는 더 강력한 무역법 122조를 꺼내 들어 관세율을 15%로 전환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함.

– 이에 우리 정부는 2026년 1월부터 선물환수수료 인하 확대와 정책금융 공급(633조 8,000억 원) 등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음.

미국 관세정책 변화

시기	주요 정책 및 사건	상세 내용 및 관세율	법적 근거	비고 및 영향
2025년 1~3월	· 타깃형 고율 관세 부과	· 중국(10%→20%), 멕시코·캐나다(25%) 관세 부과	·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 관세 회피를 위한 조기 선적 수요 집중
4월	· 보편적 기본 관세 시행	·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대해 일률 10% 관세 부과	· IEEPA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체제 전환의 분기점
8월	· 상호 관세 및 면세 폐지	· 무역적자국 대상 추가 관세(최대 41%), 소액 면세 폐지	· 상호 무역법 등	· 이커머스 등 소액 물품 관세 부과 시작
10월	· 한·미 관세 협상 타결	· 한국 정부, 국익 우선 원칙에 따라 미국과 관세 합의, 15% 관세 유지,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 외교적 협상	· 한국 수출의 불확실성 선제적 해소
2026년 2월	· 대법원 위헌 판결	· IEEPA를 근거로 한 보편 관세에 대해 위헌 결정	· 사법부 판결	· 기존 보편적 기본 관세(10%) 효력 상실
	· 관세 체제 긴급 전환	· 국제수지 위기 대응 명분으로 최대 15% 관세 부과, 2026년 2월 24일부터 발효, 발효일로부터 150일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	· 무역법 122조 발동	· 관세율 상향 (10% → 15%)

자료: 언론기사 취합 재정리.

(2)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

□ 미국의 보편적 관세 및 상호 무역법 기반의 강력한 통상 정책에 따른 글로벌 교역 위축과 공급망 파편화 진전

- 글로벌 교역량 급감 및 성장 둔화: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기본 관세(10%) 부과는 글로벌 교역 비용을 직접적으로 상승시켜 세계 무역량의 위축을 초래

– 이는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음.

-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급격한 재편: 비용 효율성 중심의 공급망이 안보 및 미국 내 생산 중심으로 강제 재편되었음.

– 특히 중국을 겨냥한 고율 관세는 탈중국 현상을 가속화했으나, 동시에 전 세계적인 생산 비용 상승을 유발

- 인플레이션 압력 전이: 관세는 결국 수입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미국 내 물가를 상승시켰으며, 이는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 시점을 지연시키는 등 글로벌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였음.

- 보복 관세 및 통상 전쟁의 일상화: EU, 중국 등 주요 경제권이 대응 관세를 부과하면서 다자간 무역 질서(WTO)가 약화되고, 국가 간 개별 협상이 중요해지는 안보적 산업주의 시대로 진입

(3) 정책적 시사점

□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도전과 기회의 공존

- 도전 요인으로는 미국의 고율 관세 장벽과 글로벌 공급망 파편화에 따른 수출 가격 경쟁력 약화 및 국내 기업의 생산·물류 비용 급증

– 수출 성장세 둔화: 우리나라는 GDP 대비 수출 비중이 높아 미국의 관세 부과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음.

* 특히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등 주력 수출 품목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어 2026년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2025년 대비 낮아질 것으로 전망

– 미국 내 현지 생산 압박 가중: 관세를 피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 건설 및 투자를 확대해야 하므로, 국내 투자 위축 및 일자리 유출 우려가 제기

– 공급망 비용 상승: 핵심 광물이나 중간재를 중국에 의존하는 경우, 미국의 대중국 관세 강화로 인해 공급망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전환 비용이 발생

- 기회 요인으로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반사이익 확보 및 조선·원전 등 한·미 전략적 경협 분야에서 독보적인 신시장 선점 가능

- 중국 대체 수요 확보: 미국 시장 내에서 중국 제품에 대해 20~6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조선, 가전, 고사양 반도체 등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창출

- 한·미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원전, 조선 MRO(유지·보수), SMR(소형모듈원자로) 등 미국이 자국 내 공급망 부족을 겪는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화되면서 새로운 시장 창출 가능

□ 정부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에서 혁신 생태계 설계로 정책 추진 필요

- (신글로벌 경제정책 수립) 한·미 전략적 투자 파트너십을 강화(한미전략투자공사 신설 등)하고, 미국 시장 내 우리 기업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협상 체계를 상설화

- (공급망 안정화 기금 운용) 핵심 광물 비축량을 1년분으로 확대하고,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입선 다변화를 재정적으로 지원

- (첨단 기술 초격차 확보) 관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압도적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AI, 반도체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국가적 역량으로 집중

- (안보적 산업주의의 상설화) 관세 등 통상 현안에 일회성으로 대응하기보다, 국내생산촉진세제와 같은 법제화된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여 기업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내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

- (국가 자산의 전략적 운용)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른 20조 원 규모의 국부펀드 신설은 정책 자금이 단순히 보조금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산업에 투자되어 국부를 창출하는 수익형 모델로 전환됨을 의미

- 이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대규모 혁신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동력이 될 것임.

- (규제 패러다임의 네거티브 전환 가속화) 신산업 상용화를 저해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통합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경제형벌의 합리화를 통해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지 않도록 도전 가능한 법적 토양을 마련

□ 기업은 위기 방어에서 구조적 선점 전략으로 전환 필요

- (국내외 거점의 전략적 재배치) 기업들은 이제 단순한 수도권 입지에서 벗어나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중심의 지역별 특화 산업벨트에 주목할 필요

-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최대 15년)과 RE100 전용 산단 입주 혜택을 결합하여 생산 원가를 절감하고 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입지 전략이 필요

- (제조 원가의 근본적 재설계)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을 상쇄하기 위해 공정의 디지털화를 넘어 로봇과 AI가 결합된 피지컬 AI를 현장에 이식

- 정부가 추진하는 15대 선도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자율주행 물류 로봇이나 스마트 제조 공정을 도입함으로써, 고질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과 생산성 폭발을 동시에 꾀해야 할 것임.

• (녹색 전환의 수익화) 정부가 구축하는 한국형 전환금융과 탄소크레딧 거래소를 활용하여 기업의 저탄소 기술 투자를 자산화하고, 녹색 제품 인증제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프리미엄 지위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

이임자 | 산업탄소중립연구실 연구위원

3. 업종별 산업정책 인사이트: 철강

(1) 국내 주요 정책 동향 및 시사점

• (산업전략) 철강산업의 단기적 위기 상황을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발표(2025. 11)

- 설비 규모 조정 및 지원: 공급 과잉 품목(철근 등) 중심 설비 조정 유도 및 사업재편 지원, 경쟁력 강화 품목(전기강판, 특수강 등)에 선제 투자 촉진
- 수출장벽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미국·EU 등 통상조치에 대한 협상 대응 및 금융·보증 지원, 반덤핑 회피 차단, 원산지·수입 모니터링 강화

* 우회덤핑 제도 강화를 위해 관세법 개정, 수입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대외무역법 개정 추진

- 기술 개발·AI·수요 창출: 특수탄소강 등 고부가 강종 R&D 확대, 공공조달과의 연계를 통한 수요 창출 및 산업 현장의 AI 전환
- 단계적 그린 경쟁력 확충: 전기로 확대 및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추진, 저탄소 철강 기준 마련 및 철스크랩 산업 육성
- 상생협력 및 안전 강화: 산업위기 지역 지원 및 지역경제 안전망 강화, KS 기준 강화와 산업안전 투자 확대

*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포항(2025. 8 ~ 2027.8), 광양(2026. 2 ~ 2027. 2)

• (산업육성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6월 시행 예정

-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은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전략이며, 철강산업 특별법은 그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법적 인프라로 볼 수 있음.
- 저탄소철강 기준부터 수요 창출, 특구 지정 및 재생철자원 가공 전문기업 육성 등을 통해 저탄소 철강 생태계의 전 주기 지원 체계 마련
- 또한 공정거래법 특례(사업재편을 신청하려는 기업도 정보 교환 허용,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예외적 승인, 기업 결합 심사기간 단축 적용), 전력·수소·용수 등 공급망 설치·확충, 국제 협력,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포함

- (추진 체계) 기본계획(5년), 실행계획(1년) 수립 및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 정책 영향 분석 및 전망

- **철근 등 국내 공급 과잉/범용 분야에서의 사업재편 논의 촉발**

- 단기적으로는 과잉 설비 분야에 대한 자율적 설비 조정과 통상 대응을 통해 생존력 확보를 모색

- 중기적으로는 특수강·AI 기반 고부가화, 장기적으로는 수소환원제철 중심의 저탄소 대전환을 축으로, 철강산업을 범용재 중심의 양적 성장 구조에서 고부가·저탄소 중심의 질적 성장 구조로 재편 추진

- **철강 저탄소 전환 투자 촉진**

- 법안에 담긴 전 주기적 관점의 탈탄소 전환 지원정책(기술 개발, 상용화, 수요 창출, 원료공급망 안정화, 재원 거버넌스)이 향후 K-GX 전략에서 구체화될 경우, 에너지·원료 불확실성을 완화하면서 미래 저탄소 투자를 촉진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가능

□ 정책적 시사점

- **이행력 확보와 참여 의지 제고가 관건**

- 이행력 확보를 위해선 철강의 전략적 가치와 첨단 유망 분야 발전을 뒷받침하는 기초소재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

- 참여 의지 제고를 위해선 철강산업의 미래상에 대한 비전 수립과 중장기 산업 전망 제시, 산업 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한 고도화된 연구결과의 축적 및 공유가 선행될 필요

- **국가 차원의 산업체질 강화와 지역 차원의 산업 전환·생태계 혁신이 병행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

- 중복 사업 지원을 지양하고 국내 철강산업의 전문화·분업화를 지원

(2) 글로벌 산업정책 인사이트 및 시사점

□ 주요국 산업정책 및 해외 정책 동향

- **(EU_무역) 글로벌 철강 과잉 공급 대응을 위한 신규 보호조치 추진**

-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INTA)는 2026년 6월 종료 예정인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기 위해, 글로벌 과잉 공급으로부터 EU 철강 시장을 보호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채택(2026. 1. 27)

* 무관세 수입쿼터를 연 1,830만 톤으로 제한(2024년 대비 약 47% 축소)
* 쿼터 초과 물량 및 비적용 품목에 대해 50% 관세 부과

* 철강 제품의 용해·주조(origin) 추적 요건 강화
* 러시아·벨라루스산 철강 전면 수입 금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무관세 유지

- 글로벌 철강 과잉 공급과 저가 수입 증가로 인한 EU 철강산업의 수익성 악화, 고용 감소, 탈탄소 투자 위축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향후 유럽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와의 협상을 거쳐 2026년 7월 이전 시행을 목표

• **(EU_환경)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 및 적용 범위 확대 발표**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그간의 전환 기간(2023~2025)을 마치고 2026년 1월 1일부로 정식 운영 단계(definitive period)에 진입(EC)

* 2027년 5월 31일: 2026년 수입분에 대한 CBAM 신고 마감
* 2027년 7월 1일: 신고된 배출량에 대응하는 CBAM 인증서 제출 마감

- 한편, 2028년 1월 1일부터 CBAM 적용 범위가 확장되고 철강·알루미늄 고함유 다운스트림 제품 180개(산업용 부품·기계·가전 일부)가 새로 포함(EC, 2025. 12. 17)

* 완성차의 경우, 승용차는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화물자동차 등 상용차는 포함, 부품의 경우 차종과 관계없이 샤시·차체·기어박스·휠 등 철강·알루미늄 비중이 높은 핵심 부품들이 대거 지정

- EU 제조업체가 탄소 누출(carbon leakage) 위험에 처했을 때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기금(Temporary Decarbonisation Fund)과 우회(circumvention) 방지 대책, 보고·추적 강화 등의 추가 조치 도입도 발표

• **(독일_산업) 산업용 전력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 정책 마련**

- 독일 정부는 2026년 1월 1일부로 전력다소비 산업(예: 철강, 화학, 유리 등)에 대해 특별 산업용 전기요금(industrial electricity price) 제도를 도입할 예정

- 목표 전기요금 5유로센트/kWh는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인하 규모

* 현재 대형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적용 기업 약 10센트/kWh, 비감면 기업 약 16센트/kWh

- 2026~2028년까지 3년 한시적 적용되며 지원 대상은 금속, 화학, 건자재, 제지 등 EU의 탄소 누출 리스트(Carbon Leakage List) 기준을 참조하여 국제 경쟁에 노출된 에너지 집약적 산업을 대상으로 함.

- 단, 주요 조건(EU 국가보조 규정에 따른 제한)에 따라 이번 조치는 전력요금 부담 급증에 대한 근본 처방이 아닌 단기적 완화책(short-term relief)으로 평가(Deutsche Bank, 2025. 11)

* 전체 전력 사용량의 50%까지만 지원 적용, 절감된 금액의 최소 50%를 탈탄소 투자에 재투자 의무, EU-ETS 간접배출 비용 보상제도와 중복 수혜 불가

• **(중국_무역) 2026년부터 철강제품 수출허가제 도입**

-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HS Code 72류(철강)에 해당하는 300개 세부 품목을 수출 허가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2025년 수출 허가 관리 품목조정안'을 공고(2025. 12. 7), 해당 조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 주로 고철 및 일부 빌릿 대상이었던 2007년의 기존 조치보다 반제품부터 판재, 봉형강, 특수강까지 철강 제품 전반으로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

*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수출계약서와 제조사가 발급한 품질검사증명서(Quality Inspection Certificate)를 첨부해 상무부 또는 지방 상무 당국으로부터 개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한층 진일보된 규제로 평가

- 부가세(VAT) 회피 수출 경로를 통한 비정상적 저가 수출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되나 중국의 빠른 내수 감소에 따른 여전히 높은 과잉 공급 규모, 지방정부의 소극적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 시 제도 시행에 따른 실질적 수출 감소 효과는 불확실

□ 정책 영향 및 시사점

- **불확실한 통상환경과 주요 시장의 수요 회복 지연을 고려한 수출 및 내수 시장 대응전략 마련 필요**

- 주요국은 보호무역, 친환경, 공급망 자립의 3대 흐름을 중심으로 철강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 중이며, 이에 따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철강 보호무역 기조는 지속될 전망

- 최근 대미 수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재고 소진에 따른 일시적 증가일 가능성, EU 시장으로의 접근 제한, 중국의 제3국 시장에서의 지배력 강화, 반덤핑 관세 확대 가능성 등으로 통상 여건의 어려움은 연중 지속될 전망

- 전력·AI 인프라, 수소 및 친환경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새로운 기회 요인 발굴과 더불어 국내 수요산업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안정적 내수 시장 확보 및 동반 수출 기회도 모색할 필요

- **본격적 탄소무역규제의 시행에 대비하고 산업 위기 극복 및 저탄소 전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 필요**

- 탄소무역규제 대응을 위한 저탄소 강재 생산 수단 확보와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더불어 탄소무역규제의 공급망 차원으로의 확장에 대한 전 산업 영향 평가 및 대응전략 마련 필요

- 산업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은 탄소 저감 수단 활용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해외의 산업용 전력요금 경감제도 등을 참고한 전력요금 부담 경감 방안 검토가 시급한 시점

이재윤 | 산업탄소중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KIET
산업 인사이트

2026년 2월호 통권 제2호

발행인 권남훈
편집인 이두희
발행일 2026년 2월 20일
발행처 산업연구원
등록 1983년 7월 7일 제2015-000024호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홈페이지 www.kiet.re.kr
전화 044-287-3114
팩스 044-287-3333
구독문의 044-287-3146
디자인 ㈜디자인집
조판 및 인쇄 ㈜프리비

ISSN 3092-4448

「KIET 산업 인사이트」에 실린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산업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